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1) 혁신성장그룹(이승환, 여영준, 정훈, 김은아, 정혜윤, 성문주, 박성원)

혁신성장 아젠더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개원 이래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집중해야 할 중점 아젠더에 관한 중장기발전전략 연구를 진행해옴. 본 브리프는 혁신성장그룹이 중장기 국가 성장 비전 '첨단 녹색 사회(High Tech Green Society)' 구축을 위해 진행한 연구에 기반하여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7대 아젠더를 제시함.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복수의 대립 세력에 의해 공동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견을 가진 정치세력 간에 보다 풍부한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함

분류	아젠더 제목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정책과제
High Tech (디지털·첨단)	AI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류 중인 시법 보완 및 통과 AI 안전연구소 설립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제도(K칩스법)의 한시적 운용을 넘어 기간 연장 국가 차원 전략적 목표와 국가전략기술별 특성과 산업생태계를 복합 고려한 조세지원제도 고도화
Green (기후·환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산업부문 전략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수립
	녹색전환을 위한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전환 성공에 주요 변수인 핵심자원 공급안정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안보 이행전략 수립 순환경제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Society (노동·교육·공동체)	고령사회 친화적 노동·복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계속고용제의 법제화 등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령자 정책의 설계 고용보험 개편 등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다양한 잠재력 계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안착 지역사회 혁신과 연계한 고등교육기관 역할 및 기능 다변화
	지역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수당 신설

AI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한국의 AI경쟁력은 세계 6위 수준이나(23, Tortoise) 1위 미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447년이 걸리는 등 최상위 국가와 기술격차가 크고(24, AIPRM), AI 확산과 함께 안전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중
 - 21대 국회 들어 AI 관련 법안이 12건 발의됐지만 모두 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며, 대안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
 - AI 안전 정상회의(Safety Summit)에서 영국과 미국은 우수한 연구자로 구성된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발표하며 AI 안전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표준 등 글로벌 정책주도권을 확보 중이나 현재 한국은 관련 논의가 부족

● AI법 제정을 통해 AI경쟁력 강화 및 안전체계 구축기반 마련

- 문제로 논의되는 AI 신뢰성 및 안전 등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

● AI 안전연구소 신설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구현하고 글로벌 정책주도권을 확보

- 안전한 AI 개발, 표준 설정, 배포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보호
- AI 관련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운영을 고려

1) 개별 아젠더 작성자 순서임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고도화

-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략산업의 혁신성과 창출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
 - 우리나라는 「조특법 개정안」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나 해외 주요국은 5년~10년의 제도 운용 기간을 고려함
 - 우리나라는 기업규모별 세액공제를 차별화해 제공하는 반면, 국가전략기술 모두에는 동일한 세액공제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전략기술별 고도화된 생태계 조성에 한계를 보임

●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제도(「K칩스법」)의 한시적 운용을 넘어 기간 연장 논의 필요

- 안정적인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 일몰 시한을 개정하거나 상시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일몰기한을 앞둔 「K칩스법」 연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기술패권 시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운용 기간에 논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

● 국가 차원 전략적 목표와 국가전략기술별 특성 및 산업생태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조세지원제도 고도화 필요

- 전략기술별 발전 주기와 우리나라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범위와 기준 개편 (예, 기업규모 중심 접근에서 전략기술 구성요소 중심 접근으로 전환)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및 개방형 혁신 지원 세액공제 제도로 확장 필요 (예, 세액공제를 협력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고려 가능)
-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들을 제도화할 필요 (예, 매출과 수익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투자를 이행한 기업에 대한 세액환급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산업부문 전략성 제고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설정되었으나, 부문별 중장기 이행전략이 부족하여 실질적 탄소중립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 제시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하위계획들만 수립되고 있으며, 열 부문 전략 부재,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일관성 미흡 및 에너지 요금 통제 등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저해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기후통상 정책 및 입법에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의 법안 위주로 발의되고 있어 국내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성 제시 기반 마련
-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전력뿐 아니라 열에너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부문별 정책의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에너지 유관법 개정
- 국가 법정 중장기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권을 강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정쟁화 중단 및 일관성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신뢰성 및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하여 에너지효율 및 신산업 활성화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수립

- 제조업 기반 국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입법 추진
-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에너지 산업 선점 기반 마련

녹색전환을 위한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 해외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환경규범이 강화된 보호무역 요소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포착됨. 녹색전환에 필수 요소인 핵심원자재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제도기반 및 기술경쟁력이 미흡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잠재력이 큰 순환경제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 2024.1.9. 국회를 통과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재자원화, 기술개발, 국제전략 등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전략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이행력에 제약이 있음
 - 2024.1.1. 시행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순환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산업계 및 무역에 영향력이 큰 에코디자인규정, 디지털제품여권, 그린워싱 방지 등 빠르게 변하는 국제환경규범 대응이 미흡

● 녹색전환 성공에 주요 변수인 핵심자원 공급안정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안보 이행전략 수립

- 「자원안보특별법」을 범부처 거버넌스에 기반하는 내용으로 개정
- 주요국 기술산업 경쟁이 치열한 핵심원자재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R&D 사업 추진
- 배터리 핵심원자재 및 소재·부품 자급도, 재생자원함유율 등의 해외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제도 개선 및 외교적 대응력 강화

● 순환경제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강화된 에코디자인규정에 포함된 내구성, 보수·수리·재활용 가능성, 부품 재사용 가능성 정보를 담은 에코라벨 인증 국내 기관 지원 및 산업계 역량강화 정책 추진
- 배터리여권에서 시작하여 모든 전자기기, 섬유, 가구, 철강, 시멘트로 확장될 예정인 디지털제품여권 제도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표준이 반영된 제품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본격화
- 강화된 국제환경규범 및 인증 요구가 신무역장벽이 되어 국가 간 갈등이 깊어지는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회외교 역량 강화

고령사회 친화적 노동·복지 정책의 실현

-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한국의 고용체제는 고령사회 친화적이지 않음(주된 일자리에서 50대 초반에 퇴직해 열악한 고령 노동시장에서 평균 15년 정도 근무).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 현행 '60세 정년과 맞지 않으며 고용보험 등 고령자 복지 정책도 취약
 - 현행 '60세 정년제'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 및 연금 수급 연령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규범 수준이 낮아(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51.1세, 30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정년제 미도입) 정책적 한계가 명확
 - 65세 이상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노령연금도 노동시장 은퇴 후 급격한 생활 수준 하락을 방지하기 어려움

● 65세 계속고용제의 법제화 등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령자 정책의 설계

- '60세 정년제'를 '65세 계속고용제'로 법 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
- '60세 정년제 및 65세 계속고용제'가 노동시장에서 보다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부 지원책의 마련

● 고용보험 개편 등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 65세 이상 노동자도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10조2항)을 개정
- 실업 급여 중심 고용보험제를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일본형 '고령자계속고용급부'등 임금보조금 지급 등)를 전면 개편하는 등 보다 고령사회 친화적인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 초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 발표²⁾)에 따르면, 2035년에는 2020년 학령인구 대비 초중등학교 학령인구는 약 44%,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약 32% 감소 예정으로 전망되며, 대학교육연구소(2022.1 발표³⁾)에 따르면,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2040년에는 2020년에 비해 약 40% 감소할 전망이다. 기존의 학교규모 팽창 시기 개인 간 경쟁 패러다임에서 학교규모 감소 시기 개인별 고유성 존중 및 사회의 다양성 확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함
 - 현재 정부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진로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중이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수단 간 연계성 부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벌대학 사업을 도입·추진중이나, 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해결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필요

● 개인별 다양한 잠재력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안착

- 고교학점제 및 시 활용 교육과 진로교육 연계 및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 창의적인 교수·학습활동 촉진을 위해 교원 연수 및 학습공동체 지원 강화
- 개별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교육평가체제로의 변화

● 지역사회 혁신과 연계한 고등교육기관 역할 및 기능 다변화

- 지식 생산, 공유, 확산, 활용, 전수 등 지역의 산업 및 사회 혁신 프로세스 관련하여 지역대학별 기능 재편 및 지원방식 다양화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 지역 대학생 및 청년 대상 경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지역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확대
- 국가-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균형발전

- 산업화와 도시의 확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개발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의 삶의 질은 지속해서 악화, 지역정부가 주민에게 하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오랜 관행 탓에 마을 주민들은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음
 - 읍면별 지역정부가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이 일시적이고 마을별로 지원 액수가 천차만별, 초고령화, 인구감소에 인력도 부족

● 마을공동체수당 신설

- 마을공동체수당은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금.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풀을 깎는대거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일, 독거노인들의 집수리 등에 활용. 이 수당을 신설한다면, 전국에 4만8천 개의 읍면별 단위의 마을에 해마다 3백만 원을 지급, 총 1,440억 원 소요. 이는 정부가 해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해볼 만함
- 수당 신설의 시행착오를 고려한다면 첫해에 시범사업으로 일부 읍면을 선정해 실시하고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전국으로 확대, 10년을 지속한다면 48만 개의 신사업을 실행. 예를 들어 마을 승강장 환경을 정비하거나 마을영화관 운영, 독거노인 반찬 배달, 여성 귀농인 안심 거주 지원, 마을 문화유산의 조사 및 자료 제작, 마을풍물단 복원, 유희농지 활용 공동 작업, 이웃 마을 연계 공동 활동 등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임

2)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9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814053043214>